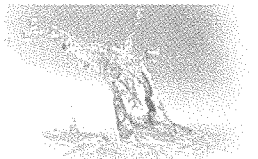

도전받는 우리 물 산업의 과제와 나아갈 길〈2〉

윤주환 |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한국물환경학회 부회장

〈지난호에 이어〉

4.3. 환경-상하수 분야 R&D 자금의 성격

대학에서 A 교수가 연구비를 교내외에서 받으면 보통 "수혜(受惠)" 받았다고 한다. 국공립연구기관의 B 수석연구위원이 연구과제를 받으면 연구비를 '확보(確保)' 하였다고 한다. C 기업 부설연구소 수석연구원이 과제를 시작하면 흔히 '투자(投資)' 를 시작한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기관의 D 과장이 국책 R&D과제를 시작 할 때는 '예산집행(豫算執行)' 한다고 한다. 앞의 밑줄 친 용어는 R&D에 관여하는 4주체의 입장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즉, 대학은 R&D를 연구 차원에서 주로 보지만, 연구소는 현재 생존차원에서 보며 기업은 단기간 내 상용화에 매달린다. 그리고 정부역시 단기간 내 가시적인 실적에만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R&D와 관련된 4자의 다른 시각은 자금투여 후 기술개발에 의한 회수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환경분야 R&D의 효율을 극적으로 저하시킨다. 예를 들어 하수처리장이 건설되는 데 만도 3~4년이 걸리므로 개발 기간 까지 포함하면 최소 5~6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IT 분야 같이 기술투자와 회수의 기간이 매우 짧은 분야에서는 R&D를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모순이 크지 않고, 또 BT 분야와 같이 전문분야가 너무나 다양하다면 상이한 입장차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하수도 분야 R&D는 연구-개발-상용화가 거의 유기적으로 일체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R&D에 대한 시각차이는 과제 추진의 불협화음과 효율저하를 낳게 된다.

단위과제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래도 문제점이 적으나 대단위 과제인 경우 엄청난 내부적인 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G-7환경기술개발사업이래 최근의 수처리선진화사업까지 추진된 거의 모든 R&D는 "상용화"의 기치(旗幟) 아래 추진되었다. 우리나라가 추진한 상용화 관련 기술을 합치면 거의 전세계 상하수도 분야 기술이 총망라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수의 membrane 분야만 보더라도 우리가 아직 잘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입하여 결과적으로 외국계 기업의 R&D 자금을 대주는 형국이 되고 있으며, 그나마 막의 표준화와 같이 상용화에서 중요한 부분은 빠져있다. 이는 R&D란 용어의 시작이 R, 즉 Research(연구)가 시작이고 연구가 되어야 D, 즉 Development(개발)와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순서를 망각한 것이다.

4.4. R&D의 성공요소

대형과제일수록 R&D의 성공여부는 정책입안자(대개

정부)-중간관리자(주관기관)-실제수행자(세부과제 수행자 혹은 위탁연구자)의 이해가 맞물려 3위 1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R&D과제를 실험실과 현장에서 수행하는 기술자-교수-연구원들이 실적을 낼 수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라진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성공한 R&D는 실제 현장과 연구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밤늦게 까지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 분야에서만 성공하였다.

중간관리자는 대형과제일수록 "사업단"의 형태로 되고 있지만 대학교연구소일 수도 있고 기업이 주관할 수도 있다. 사업단의 경우, 행정적 관리는 쉬울 수 있으나 대개 급조된 형태를 취하게 되므로 초기 위상이 취약하고 시행착오의 우려가 있다. 대학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보조 시스템을 잘 구비한 집단이므로 유리할 수 있지만 관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대로 관리(즉, 조정)하기 쉽지 않다. 기업이 주관하는 경우는 국가 자금을 이용한다는 점 이외는 큰 이익이 없는데, 그 이유는 기업의 자금이 충분하면 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면 되기 때문이다.

사기업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용화를 지향하는 정부주도 R&D 자금의 성격으로 보면 실질적인 동기유발요인은 관련자에 따라 매우 다르다. 정책입안자나 관의 입장에서 보면 "과제의 성공" 판정이외 당사자에 대한 동기 유발요인이 거의 없다. "실패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결과일 수도 있다. 중간관리자(사업단 혹은 기타)의 입장에서 동기유발요인 역시 매우 낮다. 사업단의 경우, "자리"가 만들어 진다는 것 이외에 사업을 관리하여 얻을 이익은 큰 것이 없다. 오히려 대학인 경우, 간접비(overhead)라도 조금 남으므로 대학의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과제 실제 수행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incentive는 더욱 미약하다. 과제가 성공한 경우, 기업의 수행당사자가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tangible) 이익은 기업 내부의 보상 이외에는 거의 없다. 대학에서 위탁과제를 하는 경우, 유일한 동기유발요소는 참여 연구원(대학원생)들의 연구수행과 논문업적 정도일 것이다. 우리나라 환경 분야 R&D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도 최근 들어 변변한 세계적 기술이 나오지 못하는 데는 동기유발요소의 부재에 있지 않았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4.5. 환경-상하수도 R&D의 성공확률

환경분야 R&D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R&D라기 보다는 투자(investment)개념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그 배경은 환경분야기업의 기술개발 능력이 취약한데도 원인이 있지만, IT산업적인 R&D발상이 특성이 다른 환경분야 R&D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환경분야 정부주도 R&D는 투자 자금의 회수율에 의하여 평가되기도 하는데 이는 투자 회수기간이 긴 사회기반산업이자 공공복지기술을 단기간 상용화의 잣대로 보는 것이다. 우리 환경기술진흥원의 경우, 이 회수되는 자금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기술료의 형태로 협약을 한다. 이 접근 방법은 R&D라기 보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R(Research)-D(Development)- C(Commercialization)이다. 즉, 공적기관이 사기업을 데리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뜻이다. 상용화의 성공률은 기업에서 자체 추진하는 경우에도 매우 낮다. 그런데 투자한 돈 회수할 생각부터 먼저 하는 과제라면 과연 이런 R&D를 정부가 할 필요가 있는지 반문한다. 즉, 논리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관에서 상용화과제를 추진하고 관리하기 보다는, 아예 상용화가 전문인 민간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

최근 상용화에 기반을 둔 수처리선진화사업의 한 예를 보면, 상수분야 분리막제조의 대외 경쟁력도 미흡한 시점에서 상용화의 기치를 든 용기는 매우 대견하지만 정확한 현실파악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 1992년 시작된 G-7 Project 하수 BNR 분야의 예를 들어보면, 당시에도 상용화가 최종 목표로 단위 중과제에 7개 주관기업 및 대학이 과제를 수행하였는데 10년이 지난 현재 실제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가 되어 돈을 번 예는 후하게 보아 2개 정도로 생각된다. 나머지 5개 과제는 기업의 도산이나 만들어진 기술의 적용 불능 등으로 인하여 사라져 버렸다. 이

와 같이 가장 상용화 가능성이 큰 하수분야 R&D사업에서도 실질 성공률은 낮다. 그래도 그나마 당시 하수 BNR 분야의 R&D가 비교적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든 이유는 참여자들에게는 명확한 동기유발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① 기업은 BNR 신기술 습득의 의지 ② 대학은 일본 등 선진국을 따라 잡자는 소명의식, ③ 관은 고도처리시대를 대비하는 정책적 배려 등의 요소가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R&D는 절박한 동기유발요인과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이미 상하수도분야의 문제점은 잘 알려져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목표가 명확하고 방법론이 타당하다면 R&D는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미구에 다시 새로운 과제가 만들어 질 것이다.

참고로 1992년 G-7 환경기술개발사업이래 200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환경핵심기술개발사업 및 2002년의 프론티어사업까지 10여년 동안 9가지 명칭의 대형 환경분야 R&D 국책사업이 있었음을 지적한다. "G-7"이란 사업명칭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계속 명칭 변형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아마도 정책입안자들의 입장에서 "G-7사업"이란 명칭이 당시로서는 너무나 과장된 것으로 IMF 외환위기를 맞은 국가에게는 너무 과분한 것이었기에 바꾸었을 것이다. 하지만 과학기술분야의 R&D정책 명칭은 비전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권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최소한 10년 단위로 2기 내지 3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은 너무 이상론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10여년간 환경분야에서 가장 팬시한 이름으로 9개의 대형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의 부재보다는, 실적주의에 치중한 나머지 철학과 비젼의 빈곤을 노정하는 것으로 비판받아야 한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사용할 명칭이 없어 과제를 추진하기 힘들지도 모를 일이다.

5. 규제받는 물 산업: 적정한 규제 한계는?

5.1. 적절한 수질규제는 산업의 성장동력이 된다.

우리의 하수 분야만 놓고 보면, 하수처리장 방류수 배출기준이 만들어진 이래 계속 강화되어 왔다. 환경청이 창설된 이래 미국의 2차처리기준인 BOD-SS 각각 30 mg/L의 통계적 평균농도 규제기준이 행정규제의 편이성 때문에 순간농도기준으로 규제되면서, 한국의 하수처리기술은 최소비용으로 이 엄격한 2차처리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과다 안전설계를 지향하게 된다. 최근에는 BOD-SS 기준을 특정지역에서는 각각 10-10 mg/L까지 강화시켰다. 기술적 측면의 파라독스는 질소-인제거를 규제하게 되는 90년대 후반 이후 기존 처리장은 과다설계로 인하여 개조·개량이 비교적 용이하였다는 점이다(윤주환, 2005). 어찌되었든 강화되는 질소、인제거 규제는 국내 BNR기술개발 시기와 맞물려 국내 기업의 기술수준을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상수도 분야 역시 종래 일제시대이래 전수된 단순 응집-여과 위주의 정수기술이 미국으로부터 전해지는 음용수내 특정유해물질(priority pollutants)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면서 수돗물을 먹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오늘날 수돗물 불신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먹는 물 문제를 제기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환경분야에서 고급기술과 제품을 수출하고 싶다면 규제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IT 분야의 핸드폰 기술이 그 예이다. 산업분야에 따라 개발 전략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쓰기 편하면서 싸고 좋은 물건이 외국에서도 잘 팔린다는 것은 상식이다. IT분야는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가 느슨한 것으로 보인다. IT분야 대기업이 힘과 기술을 가지도록 정책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 결과일 것이다. 반면 환경분야는 나라별로 다양한 규제기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최상위급의 규제기준에 걸 맞는 고급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위기술국가에 기술을 팔 수 있을 것이고, 또 선진국도 사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하수도에서 규제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틀이자 산업적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도구이다. 개도국이나 후진국일수록 규제 수행의 문제점 때문에 비용과 편익측면에서 현실과 타협하여 낮은 기준을 가

지게 된다. 우리도 1990년대 초까지 BOD, SS도 못잡는데 N, P 제거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비판도 있었으며, 기술적으로도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국민의 건강과 수질환경을 보호하는 강력한 규제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기술자들은 이 규제기준에 맞추고자 노력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5.2. 과도한 제도적, 기관적 규제는 기업과 창의성을 동시에 말살한다.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시스템(system)이 필요하고 시스템은 조직(organization)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어느 나라든 인간이 간여하는 조직은 의인화(擬人化)된 생존본능을 가진다. 조직의 생존본능은 암(癌)세포의 무한증식 현상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암세포적인 조직 생존 본능은 균형감각 없이 숙주(즉 국민과 국가)가 병들어 죽을 때 까지 마냥 증식하려 한다. 환경부와 건교부와 수량(水量)-수질(水質) 다툼도 일종의 정부조직 내 생존논리로 비판하는 시각이 있음을 겸허히 수용하자. 또 정부 산하조직으로 공기관, 공기업을 만드는 것도 조직생존본능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시각도 비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에게는 어떠한 설명과 논리도 변명으로서 견강부회(牽强附會)하게 들릴 것이다.

상하수도 분야에서 대표적인 예로 수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같은 공적기관이 있다. 이들 기관의 존재의 이유는 분명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 졌을 것이다. 현재의 수자원 공사는 "수자원을 개발·관리"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초창기 수자원 개발에 한정된 설립목표 보다는 많이 변형되어 있다. 심지어 개발사업 및 하수처리장의 건설·운영·관리까지 영역을 확장한, 사기업으로 치면 문어발식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영역 확장은 경제성에 근간을 두었겠지만 태생적 문제를 앉고 있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몸집불리기라는 비판적 시각도 엄연히 존재한다.

지금까지 하수처리장은 전통적으로 사기업에서 설계·건설하여 왔으며, 선진국에서는 상하수처리장의 운영도 민영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는 다시 공기업이 이를 맡는다면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지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우리 실정에서 공기업이 하수·상수처리장을 모두 맡는다면 이미 관료화된 수공의 체제하에서 기존 사기업 중 남아날 기업은 몇 개 없을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공기업은 전통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민간기업에서 보는 창의성이 없다. 그런데 국내 유일한 독점적인 법정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선진국의 다국적 물기업(water company)이나 국내 공기업인 포항제철과 같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법정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identity)문제이다. 합리성을 찾기 어렵고 해묵은 수량-수질 논쟁은 차지하고, 수공 입장에서 "수질개선"을 다룬다면 환경부의 눈치를 보아야 할 것이고, 수자원문제가 나오면 건교부에 달려가야 하는 실정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그런데 이런 수공이 교육기능까지 담당한다면 전국 토목공학과의 수자원분야를 없애도 될 터이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구조조정 측면에서 환영할지 몰라도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다.

한편, 환경관리공단은 법에 의하여 "환경오염방지사업 기타 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효율적"이란 공학적으로 말하면 "경제성"의 준말이 되며 이는 "경영"을 뜻한다. 환경관리 사업을 국가기관의 힘과 후광(後光)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사기업은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여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비영리기관이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준다는데 이익동기를 가진 기업자본가가 왜 필요한가 하는 질문은 당연하다. 즉, 논리적으로 보면 환경관리공단만 환경분야에 있으면 됐지 사기업은 필요 없어도 된다는 논리와 유사하다. 장래 환경-상하수도 관련 사기업은 수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하청업체로만 기능하면 된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대학에서 상하수도공학을 전공한

학생이라면 이런 자리에 취직하여야지 사기업에 취직하여 5대양 6대주에 기술과 물건을 수출하려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공단이 계속 발전하면서 모든 일을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나 환경관리공단은 우리 건교부 · 환경부의 또 다른 측면의 자화상이다. 최근에는 기술이나 전문지식, 그리고 업적에 의하여 공직자가 정당하게 평가받기보다는 업계의 사활을 건 로비의 영향과 극히 일부의 잘못된 행태의 악영향으로 인하여 공직자 윤리규정까지 강화되는 것은 우리 업계 전체의 책임이자 자승자박의 감이 있다. 또 역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에 익숙한 공무원들이 다시 준규제기관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 기업생리에서 보면 겉으로는 웃을지 모르나 내심 행정기관을 보는 시각은 냉정하고 부정적인 내면도 있을 것이다. 수공과 환경관리공단이 관료화 된 준규제기관이 되지 않았는지 반성하여야 한다.

명분과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규제 및 관리성격을 가진 유사한 공공기관, 공기업이 많아진다면 기업은 옥상옥(屋上屋)의 부담을 지게 된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의 속성상 만들어진 공기업, 공공기관을 먹여 살기기 위하여 새로운 약간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만들게 된다. 공기관, 공기업을 위한 "약간"의 추가 규제는 미시적으로 보면 나름데로 합리성을 가질지 모르나 큰 흐름에서는 역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비판적으로 말하면, 이는 특정 집단만이 같이 일하고 같이 살자는 새로운 21세기형의 관료사회민주주의(Bureaucratic socialism)이며, 종국에는 민간의 창의성을 말살하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후진화 시키는 나쁜 제도가 될 수 있다. 한국과 같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면서 인적자원에 나라의 발전을 의존하는 국가에서는 극력 회피하여야 할 모델 중의 하나이다.

포항제철은 공기업으로서 중공업 입국을 목표로 만든 국민의 기업으로 성장하여 대학졸업생들이 선호하는 초일류기업이 되어 있다. 그 성장과정에서 약간의 문제는 있을 지라도, 포항제철이 국민과 관련기업에게 큰 해를 끼친 것 같지는 않다. 왜냐 하면 쇠라는 제품을 만들어 파는 "생산"기업이니까. 하지만 제품 생산에 의하여 자생적 이익창출이 어려운 공기업들은 과감히 그 정체성(identity)을 재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수자원공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량을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의 수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든지, 혹은 환경관리공단이 기존 사기업들의 업무영역을 잠식하지 않고도 매년 수천억의 새로운 매출을 달성할 기술적 · 경제적 가능성이 없다면, 평가 후 이들 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할 시점에 당도해 있다.

수자원 공사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물을 서비스 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수량을 관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충실히 기능하든지, 아니면 공기관의 성격을 벗어던지고 과감하게 민영화 되어야만 진정한 효율이 날 것이다. 환경관리공단의 존재는 현실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매우 애매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잘 생각하여 보면 나아갈 길이 있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포항제철과 같이 불모지에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야 하고 또 시장이 창출되면, 미련 없이 사기업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돈으로 운영되는 의미이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같은 공공 기관을 아예 KOTRA와 같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환경기술의 선봉대로 구조개편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3. 제도는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발전한 것은 인적자원과 발전의지, 그리고 제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있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발전이 정체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이 요소들 중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GDP 10,000 불시대로 넘어오면서 인적자원의 질과 개인과 국가의 발전의지의 동기유발요인에 대한 패러다임이 급격히 바뀌었다. 인적자원의 질이나 발전의지가 쇠퇴하였다기 보다

는 사람과 사람의 뜻은 바뀌었는데 제도가 발전의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도는 비젼을 주어야 한다. 즉, 이 제도를 따라가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상하수도 분야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제도가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턴키 심의제도이다. 현재 개정된 턴키심의제도는 기존 심의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집단에 의한 기술심의(기술을 평가는 하되 판단은 하지 않음)와 이를 경청하는 공무원들이 평가심의 결과를 내는(기술평가을 듣고 점수만 내는) 2원화된 과정으로 바뀌어 졌다. 우리 실정에서 턴키심사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사안으로 로비가 치열하므로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바뀐 제도이다. 기존 턴키 심의는 주로 학계(교수-연구소 등)에서 참여 하였는데 로비의 폐해가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현 제도는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턴키심사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과제의 기술수준과 능력으로 판가름 나야하므로 이를 평가하는 전문가 집단의 질과 양이 중요하다. 예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전문가 집단의 선정에 있었다. 가열되는 로비로 인하여 전문가 집단 pool중에서 양식있는 교수-연구원의 참여가 저하되면서 심사위원의 선정 양상이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 제도 역시 또 다른 개악(改惡)이라는 원성이 업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즉, 현재 제도는 기본적으로 점수를 내는 공무원 인적자원의 기술부분의 질적 우월성이 담보되어야 만 한다. 최근 공무원들의 석박사 소지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중앙부처의 경우에 한하며, 또 상의하달 형식의 공무원 인사구조와 순환보직에 의한 기술적 전문성 제고가 힘든 현실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정책과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사업까지 선정한다는 것은 명확한 논리적 모순이다. 이는 공무원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기업들은 하청업체화 시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결국에는 민간 창의성이나 경제성 제고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정책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제도를 만드는 비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 턴키 심사제도의 비젼은 명목상 투명성이다. 하지만 턴키 사업의 목적이 기술적 효율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건설사업의 추진이라면 "투명성"의 명분으로 기술과 경제성을 사장시키는 제도가 되지 않았는지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제도를 바꾸면 어느 기간 동안 시행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하여야 한다. 현 제도도 상당기간 연구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제도개선작업 수행과정의 "실질적 투명성"과 "의견 수렴의 타당성"이 있었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이 제도의 수혜자는 직접적으로는 기업이고 간접적으로는 국민인데 이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느 제도이든지 수혜자가 승복하고 따라갈 비젼을 제시하여 주어야 한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라면 빨리 재조정하여 국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2005년환경관계법규 최신판」 판매안내

법규Ⅰ(대기편), 법규Ⅱ(수질편), 법규Ⅲ(폐기물편)

• 정 가 | 23,000원 • 구입문의 | 02)852-2291(연합회 사무국)